

시진핑(習近平)의 방한과 한·중관계 평가: 전망 및 과제

전 병 곤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위원)

I. 시진핑 방한의 의의

중국의 국가부주석 시진핑이 12월 16-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예방을 비롯하여 정운찬 국무총리, 김형오 국회부의장, 경제 4단체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두루 접견했다. 이번 방한은 시진핑이 현 중국 권력 서열 6위이자 2012년 중국공산당 18대(大)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뒤를 이을 유력한 차세대 핵심지도자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었다.

이번 방한은 시진핑의 차기 지도자 수업을 위한 일본,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 4개국 순방의 일환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상호 고위층 인사교류의 일환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작년 5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수립에 합의한 직후인 6월 북한을 배려한 시 부주석의 방북 때처럼, 중국이 지난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배경은 향후 한·중관계의 진전에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II.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첫째, 양자관계 차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 한·미동맹 강화와 채널부재로 인한 상호 오해는 양국관계의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비록 양국정상이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할 것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전략관계 구축은 요원해보였다.

그러나 2009년 들어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의 일환으로 4월 권력서열 5위인 리창춘(李長春) 정치국상무위원이 방한해 고위급 인사교류 유지, 정치신뢰 증진, 금융위기 공동대응, 인문교류 확대, 전략대화 및 다자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비중 있는 인사인 류우익 대사의 주중대사 임명과 시진핑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한·중 양국의 노력과 시도는 G2로 명명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의 영향력, 미국 및 일본의 중국 위상과 역할 인정, 중·북 협력관계, 미·북 접촉 등 향후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둘째, 한반도 차원이다. 금번 방문에서 시 부주석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정치적 이해를 발휘해 한반도 정세를 더욱 완화시키고 북핵문제를 해

결하는데 경주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기존 양국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 부주석의 방문시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12월 8일 보스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으로 미·북간의 접촉이 시작되었고, 내년 4월 ‘핵안전보장정상회의’ 및 5월 ‘NPT 재검토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경제회복을 희망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성사시키기 위한 후속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중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미·북 대화에 이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이를 둘러싼 한·중 간 입장 조율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목표의 차이로 인한 간극에서부터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다자안보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현안이 증대할 전망이다.

셋째, 동아시아 및 국제적 차원이다. 시 부주석은 “지역 및 국제문제에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양국의 평화적 조율·협력은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적 위상에도 걸맞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대통령도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를 넘어서 북한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자라는 인식을 피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한·중 양국은 동북아 및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층 강화된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홍콩·마카오·대만과의 경제통합 및 동남아와의 FTA를 바탕으로 하는 10+1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10+3를 적극 추진해 왔는데,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국인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할 것이며, 한·중관계도 이러한 틀 내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본과의 경쟁 및 주도권 확보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과의 FTA 추진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G2로 명명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지만 국제사회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책임대국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한·중·일 및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중협력의 기회는 증대할 전망이다.

III. 한중협력의 과제

이처럼 2010년 한·중 양국은 양자간, 북핵문제, 동아시아 및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협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미 협력의 공고화와 함께 한·중 협력의 중요성도 증대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및 북핵문제를 고려한 한·중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상호 신뢰와 이해의 증진이다. 한·중 양국은 증대된 교류만큼 신뢰의 폭이 두텁지 못한바, 고위층 인사교류와 함께 다양한 차원의 대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북 포용정책을 선호하면서 북핵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우선시하고 있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 및 지지·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전략대화, 정부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5 트랙운용, 민간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 및 북핵문제에 관한 한·미·중 3자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양국은 상호 공동목표를 찾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이견을 좁혀나가는 ‘구동존이’의 전략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정세악화 및 긴장조성 행위 반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6자회담을 통



한 비핵화 실현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대화 및 협상국면을 조성하는데 상호 건설적 역할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북관계를 활용해 남북 긴장완화는 물론 미·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의 협상국면 조성과 협상국면 전개과정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보협력 의제의 발굴·확대이다. 한·중 양국은 NLL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의 예기치 못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핫라인 개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합의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군사관계와 교류협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중 간 북한 급변사태 논의, 중·일 간 합동군사훈련 실시 합의 등을 고려하면서, 한반도 상황관리는 물론 향후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대화 전개에도 대비할 수 있는 한·중 협력의제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의 필요성이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최대무역국이자 흑자국이며, 대미·대일 교역 총액을 능가하는 제1의 경제파트너이다. 물론 내년 현안인 한·미 FTA 추가협상 및 체결의 원만한 마무리가 우선이지만, 동아시아 차원의 한·중·일 협력 및 FTA 논의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에도 대비, 협상개시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는 한·중·일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의 위상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중 FTA는 경우에 따라서 중·북 상호원조조약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설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